

【제5기 서대문구 주민인권학교】

# 사람중심 아름다운 실천, 인권!

▣ 강의기간 : 2015년 4월 16일 ~ 4월 24일

▣ 강의장소 :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주최



서대문구

주관



인권연대



## - 자료집 순서 -

1. 강의 일정

2. 강사 소개

3.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인권의 생활화 ..... 1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4. 민주시민교육의 몇 가지 주제 ..... 19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5.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 노동인권 ..... 37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6. 역사와 인권 - 기억의 힘 ..... 51

오인영/ 고려대 교수

- 강의 일정 -

구 분	강의명	강사명	소속/직위
4/16 (목)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인권의 생활화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4/17 (금)	민주시민의식과 인권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4/23 (목)	청소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 노동인권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4/24 (금)	역사와 인권	오인영	고려대 교수

## - 강사 소개 -

### ○박경서

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천 아카데미 부원장,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 국장과 아시아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인권상 및 공로패 등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눔과 평화재단 이사장, HBM(Happy Bridge & Mondragon) 경영 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홍세화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2002년 귀국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아웃사이드 편집위원, 한겨레 기획위원을 지냈으며 진보신당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말과행' 발행인,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생각의 좌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공저),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공저) 등이 있다.

### ○하종강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1994년 '항상 떨리는 처음입니다'로 제6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고 저서로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공저)> 등이 있다.

### ○ 오인영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대 방문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최인훈의 역사문명 에세이를 모은 <바다의 편지>(삼인)를 기획하고 해제를 썼으며 <과거의 힘: 역사인식, 기억과 상상력>,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등을 번역했다. 공저로는 <나, 우리, 반항>과 <개화기 한국과 영국의 문화적 거리와 표상> 등이 있다.

#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인권의 생활화

— 서대문구를 인권 모범 區로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 서대문 구청의 인권 특강

- 인권이 살아 움직이고 인권이 생활화 되어 곳  
곳에서 우리 삶이 돋보이는 서대문구
- 인권도시 건설이 유엔 권고안인데 한국 서울  
서대문구가 인권 區로 거듭나게 실천
- 모든 방문객이 역시 서대문구는 틀리 구  
나, (연세대 네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듬)  
안산자락 산보길이 구민의 거리로 된 것 등등.
- 인권의 5가지 분야가 한데 어울리는 곳 즉 자  
유와 책임/행복/평화/골고루/생태, 생명, 환  
경이 쾌적한 곳 서대문구, 先進區

## 옛날 우리 조상들의 평화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처럼 현대판 공동체 만들기



### 세계시민 한국인의 자화상 목적 전도현상(Goal Displacement)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 OECD에 비친 한국의 얼굴:3의 가이드라인으로
- 정부는 국가 비존 먼저 그 틀 속에서 경제 살리기!
- 정치권 국회는 불완전한 입법 활동을 ?
- 언론은 국론 분열/대안 제시는 어디로?
- 종교계는 소수의 예외 황금 만능과 감투 욕에 ?
- 학계는 소수의 예외,진리 탐구보다 정치 욕에 ?
- 법조계는 국민의 신망을 못 얻고 ?
- 몇몇 장군들은 방위 산업 비리에 익숙하고 ?
- 국가 인권위는 유엔의 강등 위협에 직면?
- 국민은 양은 냄비 식 천박 성으로 행복지수 끝찌?

## 인권이란 무엇까?

- 유엔은 왜 인권의 정의를 내리지 않는가?
- 인권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몇 개의 단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 다만 3가지의 원칙 즉 :
- 천부적이며 불가양적이며 만인 공유라는 원칙만 유엔은 천명

## 우리모두 인권을 생각해 봅시다

- 사람답게 사는 것
- 나와 공동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나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이 우선임
- 인권은 내 속에 내 일상 생활 속에 녹아져 있어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
- 학문의 대상도 아니고 학자들의 강의용으로 끝나서도 안되는 내속에 내면화되어 일상 생활에서 거리낌 없이 실천이 되어야 인권이 빛나는 것임

## 우리나라의 현주소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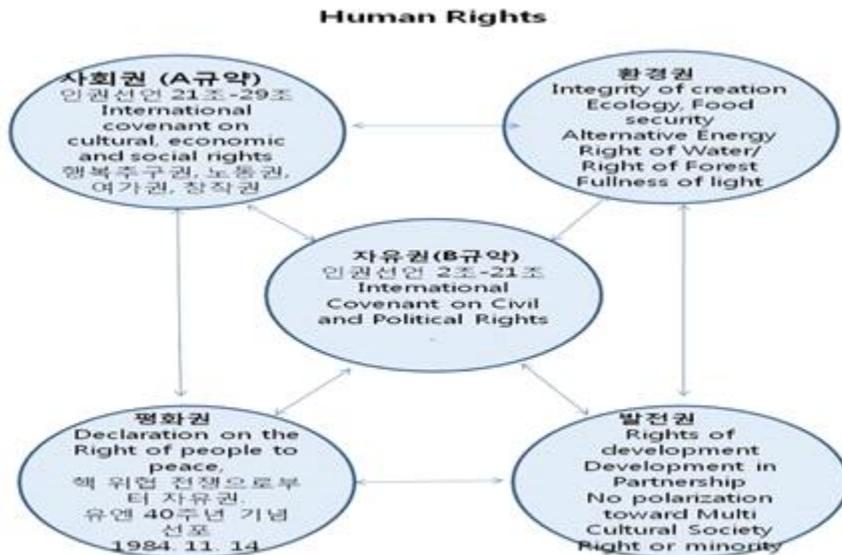
- 34 개국의 선진국 또는 선진국 도약 직전의 국가들의 연합체(경제 사회 안보 개발 문화 인권 등등의 미래의 방향제시 하는 파리 소재의 국제기구)
- 3가지의 가이드라인
- 첫째가 Stronger ; 경제에서는 10위 내외
- 둘째가 Cleaner;사회 전반의 깨끗함 꼴찌
- 셋째가 Fairer; 제반 지수에서 30위 내외

## **인권이란 우리생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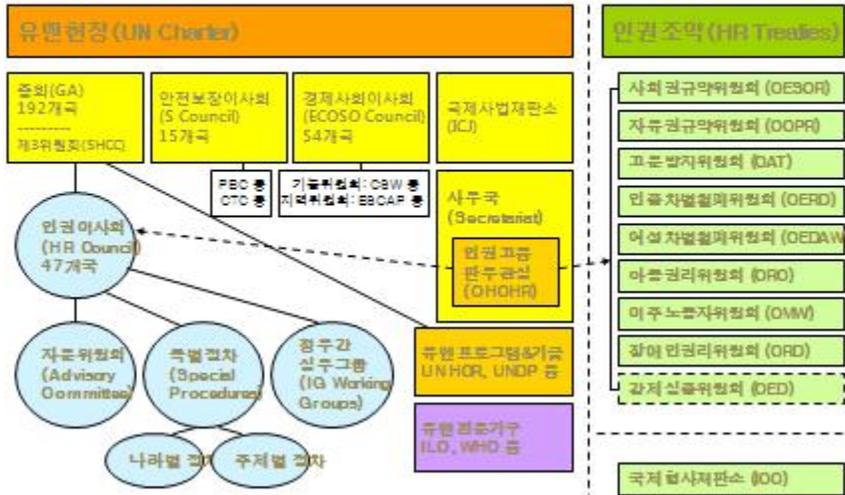
- 서울의 교통법규/제네바의 자동차/경부고속 도로의 버스로서 그리고 과다 선팅
- 베트남 여성의 죽음에서/부패 음식 유통
- 위안부 문제의 다른 측면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한계/사면 권
- 2014년 6월 29일 제네바-파리 TGV 파업
- 지하철 휴대폰/한국과 일본의 비교
- 현장에서는 가끔 서로 충돌, 몰래 카메라, 초상권, 피의자들의 취제한계 등등(Privacy Right and Freedom of Media)

# 유엔의 21세기 인권 5가지 분야

- 자유권-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
- 사회권-일 할권리, 여가선용,건강권 등등
- 평화권-전쟁과 핵의 위협에서 자유
- 발전권-골고루 잘 살수 있어야 의 권리
- 환경권-창조 질서의 보존



## 유엔 인권보호 시스템 UN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 향후15년간의 세계인권기구들의 업무영역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1. 배고픔, 극심한 빈곤에서의 탈출(세계인권선언25/사회권11)
2. 지구촌 모두 기초교육의 달성(세계인권선언26,사회권규약13-14, 아동권리규약28,여성차별철폐규약10,인종차별철폐규약5)
3. 여성인권, 양성평등사회 추진(세계인권선언2,인종차별철폐규약3, 아동권리규약2)
4. 유아 사망률 저하 총력((세계인권선언25,아동규약6/24,사회권2)
5. 임산부 건강 향상(세계인권선언25,여성차별a10,11,12.14, 사회권 12,아동24,인종차별철폐5(e))
6. 에이즈,말라리아 기타 모든 질병과의 전쟁(세계인권25,사회권12, 아동권리24,여성차별철폐12,인종차별철폐11(1) 12)
7. 자연생태계의 보존(세계인권25,사회권11(1)12,여성14,아동a24,인종차별5(e)(iii))
8. 세계 각국의 균형발전을 추진(헌장1,55,56,인권선언22,28사회권 2,11,15, 아동4,24,28)

## 유엔 평화/인권 지키는 권고를

- 5개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접근
- 인권은 생활화, 생활 속에 녹아져 있어야
- 가슴으로 보듬듯이 진정/진심으로 (Truly)
- 평화적으로 (Peacefully)
- 건설적으로 (Constructively)
- 투명하게 (Transparently)
- 비 정치적으로 (Non Politically)
- 그래서 **인권은 화해운동이요, 사랑실천 운동**이라고 말한다

## 우리 나라 인권의 현주소

- New York Freedom House의 평가
- 자유권 중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구분하여 세계 120여 개의 국가를 매년 평가함
- 1점부터 7점까지 평균 1-2점 자유국가 그리고 3-4점 반 자유국가 5-7 자유 없는 나라
- 17년간 한국은 평균 2점으로 자유국가임
- 그러나 평균 1이나 1,5점 국가가 56개의 나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57등 정도의 나라(자살률 세계일등, 부패 지수1등, 여성 인권, 성 폭력, 거짓말 등 등)
- 고속도로의 터널 건설에서 부정부패 등등

##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존재

- 미국만을 아는 것이 세계화는 아님
- 미국의 좋은 점 만/나쁜 점 과감히 버려야
- 미국의 대학이 최고가 아님
- 일본 노벨상 18명중 16명이 일본교육
- 200개의 나라를 골고루 알아야 21세기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 가난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그러면 그 나라가 값지게 보임. 그런 눈을 길러야



- 인구 70만의 평화의 도시
- 존 앙리 듀낭의 적십자 정신의 도시/대중교통의 도시
- 가장 많은 국제기구들의 도시
- 도심에서 8층 이상 건축물 금지 하므로 세계 6대의 아름다운도시

- 합리적 보수와 이성적 진보가 손잡고 제 3의 길 개척
- 걷는 도시(스위스 중립정신 기반)
- 칼빈, 루쏘, 듀낭의 인간주의 개혁정신 실천
- 10만\$ 이상의 국민소득, 검소함
- Migro/Co-op을 통한 협동조합 정신/사회적 기업 정신



## 스위스 협동조합 Migro/Coop

- 동네 곳곳의 중소 기업의 마트가 스위스 자랑  
모든 소비의 중심 800만 인구중 250/200만  
이 조합원 합계 450만이 조합원, 이중 미그  
로는 10개의 협동 조합으로 구성/600개의 점  
포를 스위스 전역에 갖고 있다
- 별의 숫자로 그 점포의 크기를 알수있다
- 알코올과 담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생필품을  
제조하고 판매/made in Switzerland
- 총 매출의 0.5%를 사회에 환원
- 미그로 생협 연합회가 전략을 짜고 조정, 구  
매 및 생산 관장, 지역 생협의 요구에 따른 서  
비스 제공



▲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 : 적십자운동의 창시자인 '앙리듀낭'의 제안에 따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협약 (서명장면)



## Jean-Henry Dunant (1829 - 1910)

적십자사 창설  
제네바 조약  
인도주의원칙 정착  
1901년 최초 노벨 평화상  
(솔 페리노의 추억)



- 노예무역의 도시에서 인권도시로 프랑스 낭트
- 노예무역의 중심지 전세계에 잘못을 공포
- 매 5년 마다 세계인권 포럼 개최 5.000명

## 낭트 칙령 앙리 4세

- 1598년 4월 13일 선포 신교의 예배 자유 허용, 독일은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
- 1685년 루이 14세 낭트 칙령 폐지
- 신교도 위그노 족들 이웃나라 이주
- 결국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는 원인 Liberte/Egalite/Fraternite
- 좌파 우파의 라벨의 허구성(프랑스/독일)
-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 노예무역의 악명을 딛고 인권도시로 승화



베르린 시내의 Kaiser Wilhelm Gedächtnis Kirche 의 2차대전 의 상흔 을 딛고 지은 현대식 교회



- 생명/생태계의 도시 독일 프라이 부르크
- 자동차가 없는도시/시내에 물이 흐르는 도시
- 태양열로 에너지를 얻는 도시
- 년 중 전 세계의 관광객이 수백만



1970년 12월 7일  
서독수상 Billy  
Brandt(1913-1992)  
폴란드 바르샤바  
2차 대전의 유대인 희생자 묘비 앞 Wandel  
durch Anealung  
(접근을 통한 변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  
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인간  
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  
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With Dr. Richard von Weizsäcker, Former President of Germany, in a Traditional Korean Tea House in Seoul, 23 April 1989

Richard von  
Weizsäcker  
(1920-2015)

독일 통일 대통령

동서독 화해의 추진자,  
유엔헌장 개정위원회  
위원장



450년의 긴 인종차별 정책의 불의 에서  
깨어난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명암  
가난의 흑인빈민가의 모습 수도 케이프  
타운의 근대적 빌딩 숲

**매년 7월 18일 유엔이 선포한 넬슨 만델라의 날:1991년,  
1998년, 2001년의  
나와의 인연**



**평화/인권/화해/생명/민주주의/발전**



**Desmond Mpilo Tutu**  
(1931 ~ Present)

**1984년 노벨 평화상  
진실과 화해 위원회 위원장**

**인종 차별 철폐  
인권운동 비폭력 평화운동**

1945년 설립된 유엔은 193개국의 회원국가의 세계정부  
3가지 임무를 천명

첫째가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첫째가 발전과 개발 (Development)

첫째가 인권/인간의 존엄성(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ially proclaims: 유엔은

- ▶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 ▶ (안전 없는 발전/발전 없는 안전 무의미하고 인권존중 없는 안전과 발전도 무의미하다. 이 세가지가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 제 3의 길을 가는 지도자 상

- 이상과 현실 동시에/그리고 사이에서 제 3의 길로
- 차선과 차악(Lesser Evil & larger Good) 사이에서 제 3의 길로
- 49%/51%의 진리를 터득/제 3의 화합으로 승화 하기
- 일보 후퇴와 2보 진전의 진리/제 3의 도약으로
-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소화하여 제 3의 선택으로 가는 지도자
- Between & Beyond의 지도자/사이에 서서 소통을 시킨 후 두 세력을 양손에 안고 제 3의 길로 도약하는 21세기 지도자
- 1등만의 세상 황금 만능주의 배경 제 3의 길/더불어 사는 길/공동체 인권/사회적 기업/사회적 자본
- 그래서 다차원적/다분야적/모두 같이 참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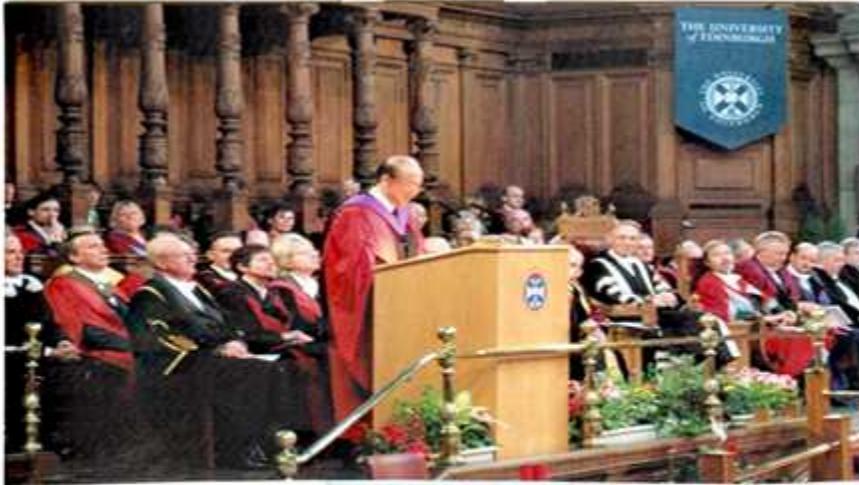


2014년 8월 14-18까지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 인자한 교황님

**평화/비폭력. 양육 강식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철퇴/가장 겸손한 게 무엇인지 실천/21세기의 가야 할 길 제시**

- 2015년 2월 28일 교황은 이태리 협동조합회의 에서
- **“성 바실리오가 말하고, 성 프란치스코가 인용했듯이 ‘돈은 악마의 똥이다.’ 돈이 우상이 되면 사람의 모든 선택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며, 이런 협동조합이 돈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써서 생명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 is not easy to speak about money. It was said by Basil of Caesarea, a Church Father of the fourth century, and then taken up by St Francis of Assisi, that "*money is the devil's dung!*" Now the Pope also repeats it: "*Money is the devil's dung!*" When money becomes an idol, it commands the choices of man. And then it destroys man and condemns him. It renders him a servant. Money at the service of life can be managed in a just way by a cooperative, if however, it is an authentic, true cooperative, *where capital is not in command over men but men over capital.*



2007년 6월 27일 영국 에딘버러대학  
“전쟁은 어느 경우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분단 60여 년은 국토만 아니고 남쪽 국민 의식도 둘로 분열...  
진정한 평화는 화해를 통해서만이 달성된다.”



## 민주시민교육의 몇 가지 주제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 1. 생각의 좌표(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

Cogito, ergo sum.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생각하는 존재’일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임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바’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물어볼 만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세계’,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생각하는바’들은 내가 태어날 땐 분명 없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지요. 은유컨대, ‘생각의 주머니’를 차고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요. 각자는 그 빈 주머니를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차차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는 ‘지금 생각하는바’에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 삶의 지향을 규정하는 ‘나의 의식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기 성찰의 물음이 됩니다. 더구나 스피노자가 강조했다듯이 사람은 이미 형성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그 나름의 성질이 있으니 바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리적 동물이라면 다른 인간과 만나고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완강히 고집하며 그 고집하는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요. 사실 “당신은 지금 존재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감히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완강하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답을 잘 찾기보다는 질문을 잘 던질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까?”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고집하는 생각에 관해 회의할 줄도 알겠지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살아가지요. 각자에게 허용된 단 한 번의 삶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삶인데 그 삶의 지향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수정하려면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성찰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기존에 형성된 생각을 수정하는 대신 거둬 합리화하면서 고집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려고 좋은 머리를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쓰지요. 우리 사회처럼 인문학적인 토대가 부족한 사회에서 각자가 겪는 사회화과정은 합리적 인간이 되도록 작용하기보다 합리화하는 인간이 되도록 작용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인데, 그 위에 인문학적 토대가 취약한 사회 환경이 우리들을 합리적 인간이기보다는 합리화하는 인간이 되도록 작용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생각하는 바를 고집하는데 그것을 다시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고집하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득되지 않는다는 점! 처지를 바꿔 말하면 나 또한 설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사는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욱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는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긴 하나 생각하는바에 관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바’들이 어떤 경로로 내 안에 들어왔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 없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자칫 소중한 내 삶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열이 오르는 등 자각증세를 보입니다. 사실 이 자각증세는 은총과 같습니다. 만약 건강하지 않은데 자각증세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고 몸의 건강을 그르치게 되겠지요. 암이 고질병인 이유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인데도 자각증세가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암 같은 병과 달리 대부분의 질병은 자각증세를 보여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해주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늦어서 탈이지만 그래도 종내는 자각증세를 보이는 암과 달리, 그릇된 생각, 그래서 내 삶을 그르칠 수 있는 생각은 그것을 버리게 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게 합니다. 생각의 성질이 그처럼 완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의 세계, 즉 의식세계는 어떻게 내 것이 되었을까?”라고요. 이 질문을 놓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과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과거 봉건사회의 노예나 종은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몸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내 몸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므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입 안에 넣는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 말고는 내가 어렸을 때의 부모님 뿐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 입 안에 넣을 음식을 선택했을 뿐, 나 말고는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내 입 안에 음식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 몸에 좋거나 좋다고 판단되는 것만 내 입 안에 넣고 나쁘거나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은 넣지 않지요. 나 또한 내 몸에 좋거나 좋다고 판단되는 음식물만 내 입 안에 넣습니다. 이처럼 내 입안에 넣는 음식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와 내가 어렸을 때의 부모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위에 우리에겐 시각과 미각 기능이 있습니다. 내 몸에 좋다고 판단된 음식인데 실제로는 상한 음식이어서 건강을 그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시각과 미각 기능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내 몸 안에 넣지 않도록 작용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떤가요? 내가 자라는 동안 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내 안에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겠지요. 나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이 내 삶을 위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동안에도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식물을 넣은 주체는 나와 나를 위하는 부모뿐이지만,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주체는 나와 내 부모만이 아닙니다. 나와 내 부모, 교사, 이웃뿐만 아니라 나와 내 부모, 교사, 이웃이 포함된, 또 이들 모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갖도록 요구되는, 이 사회에서 강조되고 이 사회를 관통하는 생각, 주장과 이념들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실제 주체인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춰 나가면서 기존에 형성된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나의 주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인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 생각은,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닐 때, 지배세력이 나에게 갖도록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어서 그것을 고집하며 살지만 나에게 그 의식을 갖도록 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지배세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제도교육과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분석이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장악한 제도교육과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대중매체에 의한 일방적 주입과 흡수만으로 나의 의식세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폭 넓은 독서와 열린 자세의 수업, 그리고 직접 견문과 성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의 세계를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때 참조할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폭넓은 독서’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주체’적으로 참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도 우리에게 읽을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은 단힌 채 서가에 꽂혀 있을 뿐이지요. 그 책들을 내가 펼쳐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린 자세의 토론’이란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을 열린 자세로 참조하려고 ‘주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직접 견문’이란 “오감을 가진 ‘주체’로서 직접 보고 겪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이란 폭넓은 독서와, 열린 토론, 직접 견문을 통해 만나는 못 생각들이 소우주와 같은 나의 의식세계 안에서 서로 다투고 비벼지고 종합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형성한 의식세계의 소유자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지며 아무리 팍팍한 세상이라도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네 경로를 통해 갖게 된 생각은 주체적으로 형성된 것임에 반해, 주입식 암기와 문제풀이로 채워진 제도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주입, 흡수된 생각은 주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독서와 토론, 직접 견문과 성찰은 내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제도교육과 대중매체에 나는 주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객체이며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의식을 형성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춘다면 그만큼 자기 삶의 참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시민으로, 나아가 고급한 문화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우리네 학교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우리는 우리네 학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물어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다닌 학교의 구조, 즉 초중고 학교의 모습을 당연한 학교의 모습으로 알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는 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근대식 제도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건 그 뿌리는 유럽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정작 유럽에는 우리네 학교와 닮은 학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관립소학교가 처음 세워진 건 1894년, 관립중학교가 처음 세워진 건 1900년

의 일이었습니다. 구한말 시기의 일이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곧 일제강점기를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근대식 교육제도는 일제강점기 동안 그 기본적인 틀이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동안 지배체제인 군국주의 일본에게 학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 일제 친황에게 충성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조선 사람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스스로 배반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을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둘째, 군국주의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에 걸맞은 예비 훈련 교육장이었습니다. 정신만이 아닌 몸도 군국주의 일본의 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셋째, 그렇게 몸과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일본제국에 충성하는 조건 아래 식민지의 중하급 관리자를 양성해서 식민지 조선을 잘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운 학교는 당연히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닌 군사 학교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학교는 실상 군사학교를 본뜬 것입니다. 교문 옆 수위실은 위병소이고, 운동장은 연병장이며, 구령대는 사열대입니다. 정확하게 병영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학교가 본래 그런 것이러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구조 속에서 어떻게 민주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병사들처럼 줄서기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차렷!” “열중 쉬어!”의 군대식 명령어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배세력에 대한 충성의식과 타율적인 질서의식을 강조하는 곳이 바로 우리네 학교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구조도 바뀌어야 마땅했습니다. 헌법 제1조가 말하듯,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일차적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형성하는 일입니다. 프랑스를 여행할 기회가 있는 분은 어느 학교든 교문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말로 ‘자유, 평등, 우애’의 세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기조인 세 개의 가치를, 프랑스의 국기가 청(자유), 백(평등), 홍(우애)의 세 개의 색깔로 되어 있듯이, 프랑스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현장인 각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공공성(Republic이 담고 있는 일차적 가치는 공익, 공공성입니다)의 가치를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학교에선 질서와 경쟁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나마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엔 주로 반공과 방첩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1948년 민주공화국이 선 뒤에도 우리네 학교는 그 새로운 소명이 실종되었듯이 일제강점기의 학교의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학교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듯이 교장이 학교를 지배 관리하는 제도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학교답게 민주적 시

민의를 함양하려면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실제로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곧 교장임용제도가 사라졌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국가권력에게는 충실한 마름이면서 단위학교에서는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교장을 국가권력이 임용하는 제도인 교장임용제도는 학교를 통해 국가주의를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민주공화국의 학교에 맞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 선 뒤에도 병영을 닮은 학교의 구조도 그대로 남았고 교장임용제도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제 천황에게 충성하자는 의식을 심어 주었던 학교는 반공의식, 안보의식, 질서의식, 국가경쟁력의식을 심어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형성하는 의식은 사유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지배세력이 요구하여 주입받은 의식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때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네 학교에서 자유의식, 평등의식을 형성하나요? 연대의식, 사회정의, 공공성, 노동의 가치의식을 형성하나요? “기초 질서를 지키자”에서 보듯이 타율적인 질서의식을 주로 형성합니다. 비판의식은 없이 경쟁의식만 부추기는 교육을 받으니 결국 기존 질서를 따르고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에게 따르라는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한국사회는 이미 양극화돼 있고 계층이 고착돼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빈곤 노동층으로, 이런 추락만 있을 뿐,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로또 복권’에 맞는 비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민이나 빈곤층의 다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리고 속으로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스카이(SKY)에 간다. 변호사, 의사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자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식에게 경제자본만 물려주었다면 이젠 문화자본과 교육자본까지 함께 물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욱 양극화됐는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식만의 계층 상승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진보적인 교육 사회학자들의 연구 주제 중에 “교육을 통해 계층 순환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즉 학교 교육을 통해 육체노동자의 자식이 관사나 의사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방향도 가능하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실증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다만 대물림을 가리면서 합리화해줄 뿐”이며, 따라서 계층의 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들이 평등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은 학교교육의 경쟁을 통해 계층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 것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데, 평등의 가치는 그 기대에 눌러 억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6,70년대나 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이 비워졌거나 흔들린 데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피라미드의 크기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라미드의 상층 부분이 이미 꽉 채워졌고 크기도 앞으로 그대로이거나 위축될 뿐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서민층이나 빈곤층의 자식이 계층 상승할 가능성은 실제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의 계층 상승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낸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민층이나 빈곤층의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교가 아직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배세력이 요구하는 의식을 주입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서민층과 빈곤층의 자식들에게 학교는 그것의 궁극적이며 실제적인 역할인 ‘부유층의 대물림’을 가려주면서 합리화해주는 과정에서 잉여적 존재로서 들러리 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서민층과 빈곤층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자기 돈(교육비)을 들여서!

### 3. 우리에게 노동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상식처럼 오늘의 한국사회가 자본주의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초중고 시절에 두루 있는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으로 빠져선 안되는 게 자본주의이다. 이는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 교과목을 왜 공부할까요? 우리 각자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 안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면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게 ‘자본주의’라는 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자본주의에 관해 무엇을 배웠나요? 자본주의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를 배웠나요? 오늘 주5일 근무를 기준

으로 하루 8시간 일하기까지 자본주의 아래 세계의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밟고 겪었는지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했나요?

얼마 전 상영된 <레미제라블>을 관람한 분들은 코제트의 어머니 팡틴이 구슬 껴는 노동을 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 일했을까요? 내 기억이 옳다면,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작품에서 당시(1823년의 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면, 파리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1830년 ‘7월혁명’의 2년 뒤인 1832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프랑스 역사에서 ‘카노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리용 지역 견직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시기와 만납니다. 당시 파리의 중앙정부는 2만 명의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했는데 그때까지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6시간 일했던 그들이 진압된 후 1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코제트의 엄마 팡틴의 하루 노동시간도 14~16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듯, 팡틴은 그 일자리에서조차 간단히 쫓겨나 인생의 막장까지 추락한 뒤 슬픈 삶을 마감합니다. 그녀를 지켜줄 노동조합도 없었고 노동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처지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굴종하면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생명”이었지요. 그 이후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가 정착되기까지 백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자본가(사용자)에게 불평등한 노사 계약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그나마 인간다운 자리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는 아무 때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일 자리를 옮길 권리가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 권리가 없어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가 바로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8시간 노동과 마찬가지로, 이 정규직 또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1세기 이상 노동자들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만약 내가 노동자라면, 그래서 육체적 품을 팔건, 정신적 품을 팔건, 품을 팔아 생존을 영위하고, 하루 14-16시간이 아닌 8시간 기준으로 일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험 없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계의 선배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잠시라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단결’이 왜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언어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요. 자본과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갖는 길은 하나로 뭉치는 것뿐이었고 그것만이 굴종이 아닌 인간으로 서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년 이상 노동자들이 외쳤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외침은 20세기말 한국 땅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노동의 분할이 이뤄진 탓이지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식당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을 화면에 담은 “밥.꽃.양.”이 상징하듯 분할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전체를 삼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 ‘기아’ 로고가 붙은 자동차 ‘모닝’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은 모기업인 기아차의 노동자도 아니며 생산업체인 동희오토의 노동자도 아닌, 동희오토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분할 통제는 본디 로마시대 이래 소수 지배세력이 다수를 통제하는 가장 유효한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노동을 ‘포섭된 자’와 ‘배제된 자’로 분리하여 이 둘 사이에 적대의 경계를 짓게 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리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한 사업장 안에서 노조가 따로 조직되었고 둘 사이의 연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주체적인 노조의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노동의 분할을 막지 못한 노동조합이 스스로 분할되는 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의 포섭과 소비주의 욕망에 의해 인간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1820년대 프랑스의 “벌거벗은 생명”인 팡틴이 묘사된 영화 <레미제라블>에 관해서는 수많은 매체와 방송이 앞 다퉈 소개한 반면, 그 2백년 가까이 지난 21세기 한국 땅의 “벌거벗은 생명”들...이 긴 겨울을 울산과 평택의 고공철탑 위에서 농성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서울의 혜화동 성당의 종탑 위에서 농성 중인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매체와 방송에게서 그리고 동시대인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4. ‘나눔’과 ‘분배’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복지를 말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곧 한국이 복지 천국이 될 것 같지만 실상 한국사회구성원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나눔과 분배라는 두 말이 본디 가진 뜻은 비슷한데 한국사회에서 이 두 말은 비슷하기는커녕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왜 그럴까?

복지(福祉)는 한자의 뜻으로 이해하면 ‘행복한 삶’을 돕는 것 정도가 됩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이란 것을 느끼고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행복’과 반대되는 고통이나 불행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고통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쉽게 ‘순수하게’ 개인적 고통이라 부르는 것들—선천성 질병이나 장애, 무능력 등—도 엄정하고 깊게 생각하면 사회적 연관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한 사회(또는 국가)가 인간의 고통—설령 순전하게 개인적 고통이라 할지라도—을 대하는 태도나 행위가 그 사회구성원들의 행복과 불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거부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등의 실천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비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부자의 품격’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의 거부인 페터 크래머라는 사람은 언젠가 <슈피겔>지에 미국 부자들의 개인적인 기부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미국처럼 기부액의 대부분을 세금공제해줄 경우 세금을 낼 것이냐 기부할 것이냐의 선택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 되면 정부나 국민이 아닌 소수의 부자들이 기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린 자에게 던져주는 동냥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신의 작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굴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특히 ‘사회적 나눔의 제도화’ 혹은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차단하거나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부자신문들도 때만 되면 ‘나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이들 신문들은 분배 문제에 대해선 눈에 쌍심지를 쏴우며 반대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돔 헬더 까마라 대주교가 한 말입니다. 브라질의 빈민지역 레시페 교구에서 생을 마감한 까마라 주교는 처음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들의 기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사회는 국민의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부자들이 독일의 32배나 되는 넓은 토지를 차지하는 반면에, 대다수 민중들은 소작인도 아닌 농업노동자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분배의 제도화 없는 개인적 선행은 한계가 있거나 부정의를 가리는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눔이 그저 개인적인 시혜, 온정, 베풀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 머물 때, 그것은 나눔의 대상이 지닌 인간적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았는지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정과 존중은 다릅니다.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9세기에 “왜 사람들은 온정이나 시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모두 받는 쪽이 아닌 주는 쪽에 서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지체계에 의존해 성장했고 자신의 재능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자신이 느끼는 자긍심이 바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데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개인적 선행의 한계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없고 동정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동정은 자긍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까마라 주교는 한 청소부에게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일하느라고 거칠고 더러워진 손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머물게 하는 사회구조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입니다. 한국사회구성원은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존엄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위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추한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 노숙인을 비롯해 주거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태어난 존재인데 그 몸이 존엄하지 못한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고 미래를 전망하는 존재이므로, 설령 지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다손 쳐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 나와 내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로 추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이 지배하는 겁니다. 특히 IMF 경제 환란을 겪으면서 존엄성 아래로 추락하더라도 국가나 사회를 비롯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안이 학습되었습니다. 불안은 가중되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다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는 악순환, 이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자화상 아닐까요?

불안은 인간 영혼을 잠식합니다. 각자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에 존재가 잠식되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사회는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경제적 존재로만 머물게 합니다. 이런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부자 되세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등으로 표현되지요. 온통 소유에 관심이 있고 소유물이 얼마나 되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소유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은 소유욕의 포로가 되면서 자본 앞에서 자발적 복종을, 나아가 굴종을 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길이 아닌 자본과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구성원들은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미래의 불안에 의해서 오늘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고 스스로 묻고 “바로 지금이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바로 지금’을 끊임없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성을 훼손하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편복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 민주 공화국이라면, 그래서 민주주의와 함께 공공성, 공익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 모두 소박하게 살지언정 최소한의 몸-자리만큼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앞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저당 잡힌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대개 다섯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교육과 양육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건강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주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까.

넷째, 노후입니다. 노년이 되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것인가.

다섯 번째, 일자리입니다.

가령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교육과 양육, 의료, 주거, 노후의 복지는 그 기본적인 것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래도 비교적 탄탄한 실업보험과 재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의 다섯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주거권 같은 경우, 제가 오랜 동안 이주노동자이며 서민으로 살았던 프랑스의 예를 보면, 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지자체는 전체 주택의 20%를 저임대로 공공주택을 확보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사회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공간으로 적어도 9평방미터를 가질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많지 않았던 저는 프랑스 국가로부터 매달 주거수당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영화 <식코>(Sicko)에서도 확인되지만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의 의료정책은 미국과 다릅니다. 제 아이들이 프랑스의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고등학생까지는 학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년 초가 되면 그 비용에 충당하라고 국가로부터 학년 초 수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일년 치 등록금으로 최대 55만 원 정도를 냈는데 이 금액 중 절반이상이 대학원생으로서 내는 건강보험료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만큼 프랑스 사회구성원들은 교육과 건강의 불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지요.

한국의 반값등록금은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인 대학생들조차 그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른바 정치권에선 가히 ‘복지 열풍’이라 할 만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복지정책들을 내놓습니다. 또 연일 다른 한편에선,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부자신문에서는 ‘복지망국’을 떠들어댑니다. 어느 쪽이 이 사회의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요? 한국은 자살률이 OECD중 1위로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식코>에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가짜 동거남을 만들어 이웃나라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는 여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왜 가난한 자들의 병원비까지 물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건 부자 아이들까지 밥을 먹이므로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는 시장을 가진 나라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은 가난하건 부자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가의 왼손’의 역할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오른손’만 살아 있어 부자들의 호주머니에 부지런히 이익을 챙겨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뺨을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아흔아홉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지만, 똑똑한 한 사람이 아흔아홉 사람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설령 똑똑한 한 사람이 아흔아홉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사회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대와 복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관심을 둔다면 새로운 복지의 가능성은 폭넓게 찾아질 것입니다. 걸핏하면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었다고 자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부는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든 이웃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연대의 정신입니다.

## 5.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모두는 다르다. 그렇다면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존중받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름을 존중하기보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데 쉽게 동원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공상과학소설에서 어떤 사람의 DNA를 입력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무수히 제조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가령 나와 똑같은 사람이 무수히 만들어진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다르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그들을 반겨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차이를 찾으려 애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모순은 남에 비해 자기가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만족해하려는 인간의 저급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려는 저급한 속성은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남을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차별, 억압, 배제하도록 작용합니다.

성찰 이성에 눈뜬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서로 장점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며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찰 이성에 눈뜨지 못한 인간은 자기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애 쓸 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고 남과 견줄 뿐이지요.

자기 성숙을 위해 내면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며, 그가 속한 집단입니다. 이 소유물과 소속집단은 인간 내면의 가치나 성찰이성의 성숙과는 무관하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합니다. 우리 조상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씀을 남겼지만, 오늘날엔 거의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보릿고개의 옛날에 비해 한국사회의 곳간에 재물이 많지만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 여유 있는 인심을 보이기엔커녕 더 야박해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겠지만, 비교우위의 경쟁이 격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내세울 학벌이나 집안이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경멸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손쉬운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가진 자,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내국인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소수자, 약자가 돼 쥐야 하는 것이지요. 소유물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내가 속한 집단은 항상 옳거나 정상이고 남이 속한 집단은 항상 그르며 비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수자, 약자 집단은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로 ‘틀린’ 집단으로 규정되고 사회에서 배제, 추방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소수자, 약자는 다수, 강자 집단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될 뿐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찰 이성이 부족하고 긍정적 가치를 함께 갖지 못할 때, ‘다름’의 관계는 서로 부정하는 관계로만 설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익’과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합리적 논거를 통해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물리쳐야 하는 부정의 관계로만 설정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인하는 경쟁대상은 설자리가 없고 내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극복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강자, 다수 집단에게 약자와 소수자는 아주 쉬운 극복대상이 되고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이분법 사고는 우리사회에서 ‘다름=틀림’의 등식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같다’의 반대말인 ‘다르다’와 ‘옳다’의 반대말인 ‘틀리다’를 뒤섞어 사용합니다. 잘못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상생활에서는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지요. 이와 같은 ‘다름=틀림’의 등식은 사회구성원에게 옳은 내(우리) 편과 틀린 네(너희) 편의 가름을 추동하고, 나(우리)와 너(그들) 사이의 다름의 관계를 ‘옳고/그름’, ‘우/열’의 관계로, 나아가 ‘선/악’, ‘정상/비정상’의 적대적 관계로까지 증폭시킵니다. 결국 소수자, 약자는 소수자, 약자라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성숙의 모색을 위한 긴장을 다수, 강자 지향의 패거리주의의 품속에서 이완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 소양을 함양하지 않도록 작용합니다. 옳은 나(우리 편)를 전제하는 ‘다름=틀림’의 등식이 타자만을 대상화함으로써 자아를 성찰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작용하는 것인데, 이런 경향은 획일적 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토양을 굳게 합니다.

소수자,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성숙의 모색을 위한 긴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다름=틀림’의 등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툴레랑스 사상은 우리의 ‘다름=틀림’의 등식을 허물기 위한 적절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틀림’의 등식이 불러일으킨 인간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낳은 게 바로 툴레랑스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툴레랑스란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성찰 이성의 소리’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대한 존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다름은 다름일 뿐이므로, 그 다름을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하지 말라는 성찰 이성의 요구가 바로 툴레랑스인 것입니다.

툴레랑스는 라틴어 어원인 ‘톨레라레(tolerare)’의 뜻이 ‘참다’라는 점에서도 ‘관용(寬容)’이라기보다 ‘용인(容忍)’에 가까우며, 더 정확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입니다. 관용에는 남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러이 봐준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 툴레랑스는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다름’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툴레랑스를 ‘관용’이라고 옮기는 것은 ‘다르다’를 ‘틀리다’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버금가는 잘못입니다. 툴레랑스는 화이부동과 아주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論語)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군자는 다른 채로(획일화하지 않으면서) 화목한데, 소인은 같으면서도 불화한다는 뜻이지요. 가령 다수 종교파가 소수 종교파에게 다수와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화목하고,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구성원을 탄압하지 않으며 화목한 것이 바로 툴레랑스이며 화이부동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툴레랑스의 요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혀야 합니다.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 출생지가 다르고 문화, 언어, 피부 색 깔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차이를 차이로만 받아들이고 차별이나 억압, 배제의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들은 성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기 쉽습니다. 성소수자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일 뿐이건만 이성애자들은 성소수자들에 비해 자

신이 ‘정상’이라는 우월성을 확인하며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에 따라 그 비율이 4-12퍼센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성애자들이 이성애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듯이, 성소수자들도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일 뿐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무릇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으되 존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법인데, 성소수자들은 소수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왕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사회적 폭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어이,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거리낌 없이 반말을 건네는 내국인들에게 분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놓을 장점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월한 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고, 여기에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를 떠다니는 인간 부초들,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 정주하면 안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상에는 단일민족, 혈통보존이라는 전근대적 사고 이외에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은 백인들에 대한 비굴한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지요.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표시하는 사람일수록 비굴할 정도로 제1세계와 백인을 선망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척하는 게 고작이지만, 백인에게는 받는 것도 없이 간까지 내줄 양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국민소득에 따라 그 나라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태도를 ‘GDP 인종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를 쓴 생 텍쥐페리가 말했듯이, 이 땅은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자손은 이 땅에서 미등록노동자들의 후예를 제외시키라고 요구할까요?

단군상의 목을 친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찰에 페인트칠을 하는 행위는 분명 몰지각한 행위인데, 나와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자세가 불러일으킨 것으로서 장자크 루소가 말한 “자기가 믿는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선의의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두에게 냉혹한 저주를 내리는 앵틀레랑스(톨레랑스의 반대)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앙의 다름은 사람들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우월 관계를 넘어 선악관계로 증폭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선악구분은 사회구성원들의 성찰이성의 성숙단계가 낮을 때 사상의 다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 사상이 옳고 너의 사상이 그르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은 선인데 너의 사상은 악”으로 발전합니다. 악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음을 강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성찰이성의 성숙단계가 낮은 데 머물러 있음을 반영합니다. 증언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18세기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이 말은 나와 다른 사상에 대한 톨레랑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와 반대되는 견해를 죽이거나 감옥에 처넣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견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의 선언은 우리에게 ‘왜?’라는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부딪힘은 부딪혀야 빛이 난다”라고 답합니다. 즉 서로 다른 견해가 표현되어 부딪힐 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다르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옳지 못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럽 땅에서 나와 다른 남을 다른 그대로 용인하라는 톨레랑스 사상은 16세기에 같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신/구교로 분열되어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산물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에 같은 민족이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잔인하게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상대방을 탓하거나 냉전 상황 탓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으며 집단적 광기에 몸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아직 부족한 것이지요.

지역주의는 이 사회의 성찰 이성의 성숙 단계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누울 자리는 선택할 수 있으나 태어나는 자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서는 지리산의 이 자락에서 태어났느냐, 저 자락에서 태어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일생동안 따라다니는 천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너, 전라도사람이지?”라는 말이 언어폭력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성정체성의 차이에 대해 그러하듯이 선택할 수 없는 출생지의 차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왕따를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각자가 선택하는 -비록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상과 신앙의 다름에 대한 시비 걸기와 차별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사상, 체제, 이념, 신앙, 출생지, 성정체성, 피부색을 다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톨레랑스 사상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획일적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톨레랑스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일차적 조건인 동시에 문화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전제인 것입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 노동인권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I.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

###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관점은 반드시 지식과 교양이나 인격의 수준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덕성이나 지식의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옳은 경우가 많은 이유는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들처럼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은 우리 사회를 조금씩 평등한 구조로 바꿔가는 것이다.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하라”는 충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익숙하게 훈련받아 온 미덕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각 장애인이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 음악가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등은 충분히 감동적이지만,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그러한 개인의 성실한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담을 읽으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나의 게으름과 무능과 불성실 때문”이라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훈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소수의 초인적 성공담들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사회의 모순된 억압 구조가 개인의 불성실로 은폐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키가 지나치게 큰 나무는 키 작은 나무에게 햇볕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가 햇볕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키를 키우거나 키 큰 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걷어내는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숲의 구조가 더욱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 산업사회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운동이란 노동자 개인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 구조(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 2. 기부문화조차 정착되지 못한 한국 사회

기부금에 관한 통계는 그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사람이 120만원의 기부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천원밖에 내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연간 기부금이 200만 원 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두 배쯤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만큼 자기 수입에서 일정 비율의 기부금을 낸다면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쯤 내면 된다. 4인 가족이라면 그 가정에서 1년에 400만 원쯤 기부금을 내면 미국 사람만큼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50%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미국 사람들은 89%가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어떤 통계수치를 보든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기부문화가 정착된 미국 사회에서 왜 빈부격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까? 미국식 기부문화는 한계가 명백해 사회 구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 주기는 하지만 그들의 몫을 빼앗아 가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자선사업가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61억 원쯤의 재산을 갖게 된 후보자에게 한 의원이 물었다.

“그동안 번 돈 중에서 사회 기부나 불우이웃을 위해 쓴 것은 얼마나 됩니까?”

후덕하게 생긴 대법관 후보자가 그 질문에 답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못해 비참하다.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도 있는 기부문화나 타인에 대한 일상적 배려가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3. 기부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

북유럽 나라들은 미국식 기부문화를 제도화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세계 최대의 휴대폰 회사 '노키아'의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단 한번 위반하고 1억3천만 원의 범칙금을 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재산과 수입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볼보'의 회장은 1년 수입의 85%를 세금으로 낸다.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부자이고 기업 경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북유럽 나라들에 그러한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1930년대에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이 그나마 깨우쳐 준 그 교훈을 까맣게 잊는 바람에 다시금 커다란 경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단한 유혹>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캐나다 외딴 작은 섬에서 120명쯤 되는 주민이 모두 실직자가 된 뒤, 복지수표를 받으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외딴 작은 섬에 공장을 유치해, 몇몇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공장을 유치하려면 그 마을에 반드시 의사가 거주해야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제도적 요구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 섬에서 한 달 동안 봉사 활동을 한 뒤, 섬을 떠나려고 하는 의사에게 그 마을의 '이장'쯤 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는 8년 동안 복지수표나 바라며 줄을 서 왔어. 자네는 한번이라도 복지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본 적이 있나? 자네는 돈도 벌어야겠지만 부끄러움도 벌어야 돼. '의사가 없으면 마을도 아니다.' 그게 진실이야. 우리가 의사 한 사람 구해보자고 이려는 게 아니네. 마을 사람 12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려는 거라구.”

더 이상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욕 먹을 일이겠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캐나다 작은 섬의 주민 120명이 어떻게 8년 동안이나 아무 직업도 없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 엄마가 아이들 셋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가 세 아이를 데리고 남의 동네 고층 아파트까지 찾아가는 동안 마음이 오죽했을까?

영화 <대단한 유혹>에 나오는 사회에서는, 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 채 잠들었던 할머니가 불에 타 죽지도 않았고, 돌봐줄 어른이 없는 가난한 어린 아이가 개한테 물려 죽지도 않았고, ‘긴급생계급여 대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장롱 안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굶주려 숨지고 두 살짜리 동생은 영양실조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구하러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아이들 셋이 타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당당하게 노동자가 될 때까지 기업의 금고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8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에 내모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겠다는 야무진 꿈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국익’에도 부합한다.

스웨덴 사민당이 65년이나 집권을 했다가 12년 만에 총선에서 패배하자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재빨리 “복지국가의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스웨덴 국민들도 결국 복지보다 성장을 선택했으니 스웨덴 흉내를 내 온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웨덴 복지 모델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스웨덴 집권 우파연합의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시각으로는 ‘극좌파’에 가깝다. 스웨덴 우파연합은 그 정책들을 상당 부분 왼쪽으로 옮기는 변신을 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이민 가고 싶어 한다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도 이미 무상의료가 실현됐다. 질병에 걸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가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제도화됐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선진국의 ‘복지병’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고 충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II. 교육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 1. 다른 선진국들의 교육

소년소녀가장들이 초인적 노력으로 공부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사를 가끔 볼 수 있다. 당연히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들이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평범한 대다수 소년소녀가장들의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라”는 가르침은 당연히 중요하고 옳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일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한 학부모 후배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어린이집을 결국 찾지 못했다”고 푸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러한 시설마다 모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서너 살 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이 과연 그 학생에게,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유익할까?

지금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독일에 살던 한국 상사 주재원의 아이가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귀택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우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표기돼있더라는 것이다. 그 부모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가게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한 산수와 알파벳만 가르쳐서 보냈더니, 며칠 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왜 그걸 가르쳐서 보냈느냐? 왜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했느냐?”고 주의를 주더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취학 전 아이들에게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가르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 살면서 자녀 둘을 교육시킨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몇 년 동안 글자는 전혀 배우지 않은 채,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면서 즐겁게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세상을 살아가거나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 동안 주목받았다. 대학은 물론 대학원 등록금까지 정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 용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반값 등록금’이 소원이 우리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얼마나 꿈같은 나라인가?

핀란드 교육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극단적 평준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심지 학교나 산간벽지 학교가 학교 시설, 교사 수준, 교육 내용 등이 모두 고르게 평준화돼 있다.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부자 동네에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핀란드 종합학교는 12년 동안 등수를 매기는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는다. 졸업할

때 단 한번 시험을 본다. 시험을 치르는 다른 학교들도 우리 사회의 시험과는 그 개념이 한참 다르다. 핀란드 교육을 소개하는 다큐멘트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틀린 답을 가르쳐 준다. 한국에서 이민간 학생이 핀란드어 시험 답안지를 내고 나갔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들 부르더니 틀린 답안들을 설명해주며 다시 풀라며 답안지를 내준다. 선생님이 시험문제의 틀린 답을 가르쳐주는데도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경쟁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들의 학교에 가서 “누가 1등이나?”고 물어보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1등’이라는 개념이 없기는 전형적 시장경제 사회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있지만 우리처럼 ‘1등’, ‘2등’ 이런 등수 개념은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들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로 볼 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 반면 유럽 나라들의 대학 진학률은 40% 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50% 대를 넘지 않는다. 등록금을 나라가 다 내주는데도 대학에 굳이 가려하지 않는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가기 때문이다. 일찍이 ‘논어’에서 공자가 말했듯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 우리처럼 ‘공부가 죽도록 싫지만’ 취직과 경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 2. 진로 선택과 노동교육

지방에 있는 한 농업계 특성화고(예전 ‘실업계’ 고교)에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교장실에서 인사를 나눈 교장 선생님이 자랑인지 한탄인지 모를 애매한 어조로 말씀하신다. “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64%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영농 후계자를 배출해야 하는 농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도 할 수도, 그렇다고 한탄할 수도 없는 애매한 현실이 한국 사회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뼈 빠지게 벌어서, 또는 논밭을 팔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불행해지는 사회이니까... 그렇다고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눈 부셨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는 해당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같이 들썩일 정도로 기뻐했다.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순간 흥분하는 선수의 모습은 매우 열광적이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러다가 혹시 실신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외국 선수들, 특히 유럽 지역 나라들의 선수들은 좀 달랐다. 물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와,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이지? 내가 정말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단 말이지?’ 정도의 반응인 선수들도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네덜란드 중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벽돌공’이라고 답했다는 기사가 기억난다. “벽돌공 일하는 곳에 가 봤는데, 하루 종일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일할 수 있더라.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벽돌 기술자가 돼 평생 음악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학에 가지 않고 벽돌공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중학생의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벽돌공의 수입이 대학교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돼 저임금이 해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들처럼 그 분야에서 일인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해 일인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사는 운동 코치의 수입이 대학교수와 큰 차이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직종 간 임금 차별이 해소되면 학문에 뜻이 없으면서도 단지 취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머리 싸매고 대학에 가는 일이 사라진다. 핀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 대학원 학비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렇게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모두 대학에 진학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학에 진학한다. 남달리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 바람직한 사회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네덜란드 최하위층의 평균소득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23번째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버는 빈곤층 비율이 네덜란드는 7.6%였으나 우리는 14.6%로 두 배에 이르렀다. 한국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고임금과 저임금의 차별이 없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돼야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

### 3. 다른 나라들의 학교 노동교육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노동인권 에 대해서 가르치고 학습한다.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노사 관계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 결정의 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 중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 가족이 되는 사회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노동문제를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독일 중등 사회과목의 한 교과서에서는 모두 340쪽의 분량 중에 93쪽을 노동인권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에 관한 내용만 29쪽이나 되는 교과서도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실들을 토론 주제로 다룬다.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임금협약,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기본협약 등과 함께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노동문제에 대한 신문기사 등이 교과서에 수록돼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노사교섭’이 일상화된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혀 있어, 기업 경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스스로 경영자 대표들을 뽑고 노동조합 대표들을 뽑아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보기도 한다. 적정한 임금 인상과 그러한 노동조건들이 노동자의 삶과 기업 경영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력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양되는 것이다. 한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는 모의노사교섭을 모두 6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체교섭을 가르치는 부분의 목차를 보면, 협상 과정에서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문건이나 플라카드와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모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한 나라만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교육도 비슷하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인문·실업계 공통으로 시민사회과목 시간에 “단체교섭의 전략과 기술”에 대해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할애해서 가르친다.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 노동시간, 공공 부문 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 성 평등 등 수십 가지의 주제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학생들에게 단체교섭의 전략 기술에 대해 몇 개월 동안이나 가르쳐서 뭘 어쩌겠다는 거

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4. 우리 역사 속의 ‘일(노동)’

신라 역사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김춘추, 김유신, 선덕여왕 같은 정치인들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신라는 당시 첨단산업인 청동주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는 내용 등이 역사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민족의 자랑’인 에밀레종을 만든 8세기 후반 신라의 뛰어난 주조 기술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대부분 모르지만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대박사 박종일이란 기술자였고, 에밀레종 한 구석에 그 이름 석 자가 새겨져있다. 그 시대에 ‘박사’는 국가가 인정한 뛰어난 장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기술자에게는 대박사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이처럼 기술자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었기에 우수한 기술을 갖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역사 교육에서 가르친다.

백제 역사를 생각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백장군, 의자왕... 등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백제는 당시 가장 우수한 고대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그렇다면 6세기 후반 일본에 건너가 고대 건축 기술의 기반을 닦은 백제의 건축 기술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석마제미, 양귀문... 같은 기술자들이었다. 세계 최장수 기업은 1,500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전통가옥 보수 건축회사인데 그 회사 설립자가 백제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거북선을 과연 이순신 장군이 혼자 설계하고 만들었을까? 거북선을 설계하고 직접 만든 사람들은 아마 훌륭한 기술자들과 목수들과 뱃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함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라는 우리의 훌륭한 역사에 대해 가르칠 때 백 번에 한 번쯤이라도, 밤을 밝히고 연구하면서 설계를 수백 번 변경하면서 수백 장의 도면을 그렸을 기술자들의 노력과 망치를 두드려 그 배를 만들었을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를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 경제 성장의 바탕을 마련한 것은 60년대의 섬유 직물 기술이었다. ‘한강의 기적’ 역시 섬유 직물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근대적 염직 기술을 배워 온 기술자는 누구일까? 안형중, 박정선... 같은 사람들이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대원균, 김옥균 등의 정치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노동의 역사는 빼 버린 채, 지배·살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이다.

## 5. ‘노동자’ 개념에 대한 오해

한국을 방문했던 핀란드 교장협의회 피터 존슨 회장은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지도층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교장도 교사노조에 가입한다. 영국에는 교사노조(NUT)와 교장노조(NAHT)가 따로 있다. 교장이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주한 프랑스로대사관의 다니엘 르 가르가송 부대사가 TV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한 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직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부대사뿐만 아니라 장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독일 역대 노동부장관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원이다. 독일에서는 비교적 보수 정치인에 속하는 메르켈 총리조차 총리 취임 인터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총리가 된 뒤에도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조합비를 계속 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노조, 소방관노조, 변호사노조, 판사노조가 설립돼 있는 선진국들도 많다. 경찰, 판사, 장관들도 국가권력과 마주하는 대립구도 속에서는 ‘피고용자’, ‘노동자’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판사들은 가치 있는 생존의 숨구멍을 트고 싶었던 것이며, 그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이 보장한 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한 것이다. ‘법복의 권위’와 ‘빛나는 지성’과 ‘판결의 엄숙성’과 같은 가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언덕에 의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물론 남아프리카나 슬로베니아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군인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 군인노조는 아프가니스탄에 독일 병력을 증강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고, 네덜란드 군인노조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잡는 3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됐다.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이는 현상이 끊이지 않았다.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도 노동자라고 깨닫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 3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 년 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신규 고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의 저해 요소가 됐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신규 고용의 비정규직 비율이 80%로 늘었다.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는 말을 듣는 국제금융자본이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요구를 했을 리는 없다.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이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급증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집단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진보세력이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 자본의 경영 방식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다. 재벌 산하 경제연구원조차 “양극화 현상이 경기 회복이나 경제 성장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격차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내는 상황이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을 사회가 계속 용인하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도외시킨 채 노동비용을 줄이는 전근

대적인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선진기업이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경제주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삶이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해롭기 때문에 해소돼야 한다.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들은 비정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강성 노조에 돌리고 있고, 정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노사가 모두 동의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것이 오히려 철저한 시장경제주의 입장이다.

### Ⅲ.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 정체성

#### 1. 역사 발전 과정과 기본적 인권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강조하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굳이 일제 식민지 시절까지 들추어낼 것은 뭐냐?”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제 식민지라는 비틀린 근대화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근대와 중세를 가르는 가장 큰 생각의 차이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상식인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다.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시민혁명이 발생한 과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어떤 시민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피눈물 나게 깨닫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 과정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매우 달랐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계급이 출현했다. 해방된 농노와 몰락한 영주, 숙련 노동자와 소생산 자영업자들이 모두 시민계급으로 편입됐다. 시민계급은 성실성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그 물질 토대가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

## 2. 일제 강점기라는 비정상적 자본주의 이행 과정

우리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박탈됐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날 갑자기 일제 식민지라는 기형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됐다.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의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해방이 된 뒤 ‘친일파’라고 불리던 식민지 협력자들은 사회 상층부에 진입하여 정치인·경제인이 된 반면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다. 근대 사회가 성립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지배 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한 집단이었다. 그 불행한 비극의 흔적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한국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각종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과 언론을 담당할 세력이 도덕적 정당성을 취약한 집단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 이상의 문제를 갖는다. 지배세력의 정당성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기 어렵다. 제도권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적 합리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익 기반은 근대 산업사회가 자리 잡는 100년 세월 동안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그 왜곡된 역사가 어느덧 한 세기를 지났다. 일제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그 와중에 군사정권 30년 세월을 겪으며 건설된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인문학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 비틀리고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 전체를 통찰해야 한다.

## 역사와 인권 - 기억의 힘

오인영/ 고려대 교수

안녕하세요. 오인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아는 분한테 독일 신문에 한국 차와 관련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사시는 나이 지긋한 교포 한 분이 애국심에 성능 좋은 독일 차를 마다하고 한국산 소형차를 사서 잘 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일의 유명한 아우토반에서 주행을 하다가 차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멍통이 된 차를 어쩔 수가 없어서 견인차를 부르려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찾는데, 없어요.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운수 사나운 날이라고 생각하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저 앞에 차가 한 대 섭니다. 보니까 ‘포르쉐’예요. 자동차 애호가들이 손에 꼽는 명품 차이지요.

운전자가 내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노인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포르쉐 운전자가 걱정하지 말라며 견인용 밧줄을 가져옵니다. 뒤에 차를 묶고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르쉐 정도라면 뒤에 차 한 대쯤 달고 가는 건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요. 노인은 내심 안심하며 포르쉐 운전자가 시키는 대로 줄을 묶고 모닝 운전석에 앉습니다. 드디어 포르쉐가 소형차를 견인합니다. 그것도 시속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말이지요. 굉장하죠. 노인은 흐뭇해합니다. 문제는 그때 뒤따라오던 차가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페라리’가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르쉐와 페라리는 최고 자동차의 자리를 두고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입니다.

페라리가 포르쉐를 ‘제끼’자 포르쉐 운전자가 갑자기 액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그러자 페라리도 이에 질세라 속도를 높이죠. 뒤에 차를 한 대 더 달고 있는 포르쉐한테 밀리는 건 페라리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시속 300킬로미터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놀란 노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면 라이트도 계속 깜빡거립니다.

누군가 우연히 이 장면만 본 겁니다. 다음날 독일 지역 신문에 한국의 소형차가 페라리와 포르쉐를 압박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그쪽 사람들로선 놀랄 만하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차더러 계속 비키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물론 견인용 밧줄을 보지 못해서 생긴 오해이긴 하지만요. 어때요 진짜 같죠?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1등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한 운전자들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노인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실 경쟁이란 게 이처럼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난센스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경쟁’이라는 걸 잠깐 내려놓고 느긋하게 역사 공부를 해봅시다.

### 역사라는 ‘이름 붙이기’<sup>1)</sup>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어잖아요. 1865년 영국의 탐험대가 이 산을 탐사하면서 전임 측정대장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원래 이름은 뭘까요? ‘초모랑마(chomolangma)’입니다. 네팔어로 ‘신성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야 ‘에베레스트’가 친숙하니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네팔 사람이 알면 서운할 거 같아요.

이번엔 우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하얼빈에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쏘 죽인 애국지사지요. 1905년부터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고 1910년에는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후로 근 40년을 식민지로 착취를 받았던 우리로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화폐에 등장할 만큼 일본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이야기와 연관해서, 만약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백두산을 보고는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이토야마(伊藤山)’라고 이름 붙인다면 어떨겠어요.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산인 백두산을 외국인들이 이토야마산이라고 부르고 다닌다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세계의 지명에는 제국주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1) 이 소제목 내에서 예시한 여러 사례들은 김정집, 『인문학은 밥이다』(RHK)의 162~167쪽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Philippines) 아시죠.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펠리페(Felipe 1598~1621)’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에콰도르(Ecuador)’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로 삼은 후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정복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라는 말을 쓰지요? 여기서 ‘아메리카’는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 1454~1512)’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통상 캐나다나 미국이 있는 북쪽을 ‘북아메리카’라고 하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쪽을 ‘남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런데 간혹 남아메리카를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틴’은 과거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에 살던 민족을 말합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죠. 라틴족의 후예가 정복한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당시 정복자였던 스페인의 입장입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로선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기까지 한 호칭이지요.

스페인이 침략하기 전 남아메리카 토착 주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 지나 17세기에 이르자 토착 주민 인구가 100만 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동안 1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정복자들의 총칼에 죽고 백인들과 함께 건너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종 말살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가치중립적인 ‘남아메리카’가 훨씬 낫습니다.

산 이름, 나라 이름 하나 바꿔 부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알게 된 이상 에베레스트보다는 **초모랑마**가, 라틴아메리카보다는 **남아메리카**가 좋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피해자였던 이들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우리도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역지사지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페루에서 온 선생님을 만났어요. 서로 통성명을 하다 출신지를 물었더니 ‘아메리칸’이래요. 저는 별생각 없이 미국 어디에서 살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미국인이 아니래요. 페루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메리칸’이라길래 당연히 미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 페

루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으니 ‘아메리칸’이라고 한 거고요. ‘아메리카America’라는 말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분 말이 이래요. 당신이 아시안Asian인 것처럼 나도 아메리칸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니 자기가 아주 피곤하다…….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사람들도 아메리칸이니, 미국인만 꼭 집어서 가리키려면 ‘미국 시민 U.S. citizen’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일리가 있어요. 미국 중심적 사고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세계는 미국 말고도 다양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외국’ 하면 ‘미국’부터 떠올립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강요받는 시대라 그런가요. 외국인만 보면 영어로 물어봐요. 제가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그랬습니다. 지하철에 가족으로 보이는 외국인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아이가 걸어오더니 그 앞에 서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대단하죠? 영어 유치원이라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꿀 먹은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멀뚱 멀뚱 꼬마를 쳐다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독일인 가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세계는 넓습니다. 영어 쓰는 나라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몇 개 안 돼요. 백인이라고 다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그 나라 사람이, 중국인 취급을 한다거나 일본어로 뭘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은근 기분 나쁘겠죠.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명은 단지 편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나 라틴아메리카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식민 통치했던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세계를 ‘서양’과 ‘서양을 제외한 나머지(rest of the world)’로 구분하고, 서양은 우월하고 비서양은 열등하다고 보는 서양 중심의 오만한 시각-이런 시각을 흔히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하지요-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소위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도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발견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서양인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름도 붙여져야만 하는’ 열등한 객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국주의(imperialism,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식민지로 삼는 침략주의 경향이나 정책)적 시각의 산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편 식민지 정책 중에 가장 악독했던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 이름을 자기들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식민지 초기에만 해도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바꾸는 데 그쳤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수 세에 몰린 일본 제국주의는 무려 2000만에 달하는 한국인의 이름을 바꿔 일본인들처럼 전쟁에 내몰겠다며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조상도 같고 뿌리도 같은 하나의 민족이라며 꼬드깁니다. 한국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뿌리째 뽑아내려 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이름 붙이기 전쟁’의 예는 많습니다. 1905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걸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권리를 빼앗아놓고는 ‘보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강도가 경찰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한동안 이런 일본식 이름 붙이기를 그대로 써 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1910년에 ‘한일합방’이지요. 여러분, ‘합방’이 뭘니까?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한일합방’이라는 말에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합방’이라는 말 대신 ‘강제 병합’ 혹은 ‘늑약(勒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군 위안부’ 혹은 ‘정신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전쟁 성 노예(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부당하게 끌려가서 착취 받았다는 의미가 충분히 들어 있지요. 반면 ‘위안부(慰安婦)’라는 말에는 ‘위안’을 주었다는 일본군의 시각이 반영된 말이고요. ‘정신대(挺身隊)’라는 말을 쓰면 자발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역사에서 이처럼 ‘이름 붙이기’에는 강자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약자들은 여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른 이름으로 고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계속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책은 매번 새로 쓰여요. 사실에 대한 해석이 늘 변한다는 점에서 역사에는 결정적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라고 딱 정해진 답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

석이 늘 옳게 바뀌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석인지를** 잘 따져보는 일이 필요해요.)

### 세종은 왜 ‘대왕’이 되었나?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때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유행해선지 ‘한석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도’입니다. 이는 성이니까 이름이 ‘도’ 외자인 거죠. 조선 시대 왕들의 이름은 처음에 왕이 된 이성계나 이방원 빼놓고는 다 이름이 외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는 왕이 쓴 이름을 일반 백성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때야 왕이 신이나 마찬가지로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왕의 이름이 두 글자면 백성이 쓸 수 없는 이름 글자가 두 글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한 글자만 사용해서, 그것도 잘 안 쓰는 한자만 골라서 왕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름대로 백성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옛날 왕들의 권한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강력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도 못 쓰는 거야 돈 드는 일이 아니니 그렇다 치고, 왕이 하룻밤 자고 가면 그 집을 통째로 헐납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에 있는 석파정(石坡亭)이에요. 지금의 서울미술관 안에 자리한 이곳은 예전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변 경치가 아주 훌륭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곳이 흥선대원군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원래는 당시의 세도가 김홍근의 별장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 집이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아들 고종이랑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옵니다. 결국 별장은 흥선대원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잠을 자고 간 건물은 자동으로 왕실 소유가 되는 시대였거든요. 고종이 왕이잖아요. 김홍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석파정을 기증합니다. 말이 기증이지 사실은 빼앗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쨌든 조선은 이처럼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나라였어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도 즉 세종에게는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왕(大王)’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훌륭한 업적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세종은 언제부터 대왕이 되었을까요?

원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동안 왕이 매일 무엇을 했는지 적은 기록물입니다. 이런 건 전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문화적 가치로만 보면 피라미드, 만리장성과 견주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태종실록』, 『세종실록』처럼 왕 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듯이 세종은 ‘대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실록’이 아니라 그냥 ‘세종실록’이잖아요. 더 놀라운 일은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굉장히 하찮은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사군육진 개척 같은 군사적 성과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자잘한 일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당시 훈민정음 즉 한글에 대해서 당시 지배층들 사이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양반들의 전유물이자 ‘대국’(大國)의 글자인 한자를 버리고 일반 백성이랑 똑같은 글자를 서야 한다는 데 좋을 리가 없죠.

세종이 ‘대왕’으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이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빼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았습시다. 아예 한글을 사용 못 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게 민족의 살길을 찾는 일이자 독립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대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애민 정신’과 ‘실용 정신’ ‘자주정신’과 같은 말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세종의 의지와 함께 백성의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은 세계적으로 수준급에 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글씨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진 백성을 다스리려면 효과적인 통치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별로 다스리기에는 백성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연구 초기에는 한글 창제의 이유로 세종 개인의 훌륭한 뜻을 꼽았습니다. 백성을 굽어살피려는 좋은 임금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살펴보니 백성이 원하니까, 똑똑해진 백성을 다스리려는 필요성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혜’냐 일종의 ‘통치술’이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제가 학생 일 때 겪은 일이에요. 학교 정문 앞에서 남자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요. 한 심했습니다. 대낮부터 술 취한 놈들이 뭐 짓이야, 싶었던 저는 가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요때만 해서 겁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날치기와 격투를 벌이는 중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 친구의 가방을 찾아주려고 육탄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아마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 학생들이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웃음) 저는 철저히 편견을 가진 제삼자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한일 강제 합병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의 시선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약 맺어서 한 나라가 되었다는데 무슨 문제야?” 할 수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게다가 피해자인 우리나라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말이죠. 문제는 무관심한 제삼자의 시선이 강자의 시선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페루에서 온 교수에게 아메리칸이면 미국 사람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인데, 보는 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한편 답답한 일이지는 하지만,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르기에, 자기가 그럴 듯한 논리를 갖추면 그게 또 하나의 답이 돼요. 이를테면,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왜 열심히 싸웠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럿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유교적 충(忠)의 윤리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유교적 충성심보다는 자기 고향과 지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아니다 전쟁 끝나면 나라에서 상이나 벼슬을 받을 생각에서 싸웠다 등의 해석이 있어요. 만약 역사에 정답이 있는 거라면 이렇게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없잖아요. 더 놀라운 건 20, 30년 역사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역사 해석에 관한 한 목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이는 게 적어도 역사라는 학문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답도 없는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나?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역사는 이름 붙이기라고 했지요. 따라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다른 공부랑 많이 다르죠? 대개는 정해진 답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혹은 거기로 향하도록 자기 생각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저도 역사를 전공하기 전에는 여러분처럼 정답 맞추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구나.’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그 방법이 전혀 안 먹혀요.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는데, 박사 학위 논문을 안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내용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독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때론 정반대로 생각하거나, 실령 다른 사람은 다 옳다고 주장해도 내가 근거를 갖고 반론을 제기했을 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눈이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인권’도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인권’이라는 말은 산이나 바다, 기쁨이나 슬픔처럼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인권’이라는 말도 ‘발명’된 거예요. ‘발견’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한일 강제 합병’이나 ‘을사늑약’,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같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까요?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사람이 만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에게만 역사가 있어요.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오로지 인간의 영역에서만 존재해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의 사용, 석기의 발명, 농사, 국가의 탄생,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변화시키거나 가공하거나, 심지어는 정복해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인권’도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300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인간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서 노예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지금 시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노예 제도’가 선형적으로 나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노예를 일컬어 “말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실망스러운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던 겁니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대략 22만 명이었는데, 노예, 외국

인, 여자를 포함해서 약 20만 명 정도는 사람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만 명쯤 되는 ‘자유 시민’만이 사람대접을 받았지요. 노예건 시민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했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런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노예와 노예 주인의 관계는 마치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럼 만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은 다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노예 제도는 사라집니다. 대신 중세에는 ‘농노’라는 게 생기지요. 이들은 이전의 노예와 달리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쟁기나 호미 같은 농기구를 갖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으며 세금을 바쳐야 했지요.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초야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을 앞둔 처녀는 영주와 먼저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에서는 하인이 주인의 시중을 들고 수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신분제가 철폐되었을까요? 누군가 부당하다고 대들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한 것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싸워나간 끝에 오늘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온 거예요. 역사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발전합니다. 만약 모두가 앞 세대와 같은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횡행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분제가 철폐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는 양반이고 공주나 왕자가 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이기 십상입니다.

**앞사람의 생각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다른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외워서 그대로 따라 하면 그 이상의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부당하지 않나?’ ‘이런 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의미 있는 역사가 열립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의견은 정치에 반영이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이사를 못 하지?’ ‘왜 내 마음대로 결혼을 못 할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도 ‘다른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자 아

이작 뉴턴도 그랬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신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유럽인들의 오랜 믿음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지구 위에서 인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줘서 인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생각했죠. 그런 오래된 신념은 아이작 뉴턴의 사과 한 방에 산산이 깨지게 되죠. 지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건 신이 아닌 ‘중력’이라는 걸 밝혀냈으니까요. 뉴턴이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이 과연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왜 사과는 하늘로 치솟지 않고 아래, 땅으로 떨어지는가?”라고 처음으로 물은 사람이예요.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어때요. 우주가 창조되고 빛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빛보다 빨리 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예요. 그전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죠. 누군가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일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새로운 진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힘입어 발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에서 오랜 동안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노예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시대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Spartacus)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노예였던 그는 ‘나는 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동료 인간을 죽이는 검투 경기에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려 시대 노비였던 만적도 그랬습니다. 당시 최고 실력자 최충헌의 사노비였던 그는 ‘도대체 왜 내가 노비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의문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자 천민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키지요.

신분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인권’은 바로 그러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사람의 피부색, 인종, 민족, 재산, 종교, 언어, 지역, 신분, 이런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이죠. 노력한다고 바

떨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만일 방금 나열한 그런 이유로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차별’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모여 ‘평등’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존엄하다는 생각을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인권’이 탄생하는 순간이지요. **인권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인간답게 살고자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대해 던진 질문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 기억이 미래를 결정한다!

역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겪은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글자를 발명해서 기억을 기록으로 연장시켰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된 과거’입니다. 따라서 실재했던 과거는 언제나 역사보다 큽니다(과거>역사).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기억이 갈립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죠. 예컨대 한 가족이 작년 연말에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여행을 다녀와서 회상하는데 가족마다 달라요. 저녁에 반주 한 잔 곁들이며 아빠가 바라본 바다, 신혼여행 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엄마가 바라본 바다, (여러분이)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툼툼이 바라본 바다는 모두 다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억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기록이나 이야기, 혹은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나 이야기는 결국 ‘기억을 연장 보존하기 위한 보조 기억장치’이기 때문이지요.

아까 든 예에서 가족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사실도 있을 겁니다. 숙소나 음식, 혹은 방문지에 대한 기억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이를 두고 ‘콩가루 가족 여행’이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 뭐지? 싶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넘게 무슨 것이냐며 항의할 일이에요. 평가의 주체는 여행의 당사자

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네팔이든 남아메리카든 그 지역의 역사와 자연의 주체는 정복자였던 영국이나 스페인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 사람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한국인이듯이 말이예요.

**역사는 '기억과 기억의 싸움'입니다. '주체적 기억과 주입된 기억'과의 싸움이지요. 또한 역사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는 영광과 승리의 드라마가 있어요. 반면 부끄럽고 힘들어서 잊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대개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술한다면 그것은 좋은 역사일까요?

기억하기 싫은 일도 길게 보면 우리네 삶에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반성의 근거가 되잖아요. 전화위복이나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지요. 부끄럽다고 기억에서 지운 다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괴롭더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지요. 괴롭더라도 독일처럼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건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식민지 피해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과거의 잘못은 덮고 가자고 말입니다. 예전에 친일파들이 쓰던 논리예요.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지면 누가 남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친일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미래를 위해 묻어두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밝혀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친일파들이 승승장구한 우리 근현대사를 직시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왜 저

들은 내게 저리 말하는지 사회는 왜 내게 능력과 쓸모만 요구하는지 의문을 품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답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태도는 분명히 우리의 현재 뿐만 아니라 역사와 미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해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요.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뇌 세포가 점차 파괴되는 퇴행성 질환이지요.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에게 기억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합니다.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저절로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어떤 것은 기억의 숲으로 자라나겠지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누가 더 의미 있는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상식이 된 ‘인권’은 과거 우리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워 온 의미 있는 역사를 잇는다면 ‘인권’은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룩한 성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이야말로 인류가 역사적으로 성취한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토록 쉽고 단순한 이야기를 맛있게 길게 해서 미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루하다 않고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 2015년 제5기 서대문구 주민인권학교

- ▣ 제 작 2015년 4월 16일
- ▣ 펴낸곳 인권연대
- ▣ 연락처 인권연대

서울시 중구 동호로30길 13, 402호(장충동2가 주암빌딩)(우 100-855)

전화: 02-749-9004      팩스: 02-3672-0438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이메일: [rights1999@naver.com](mailto:rights1999@naver.com)